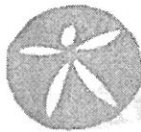


사랑 사랑

제82호 (2001/10/22)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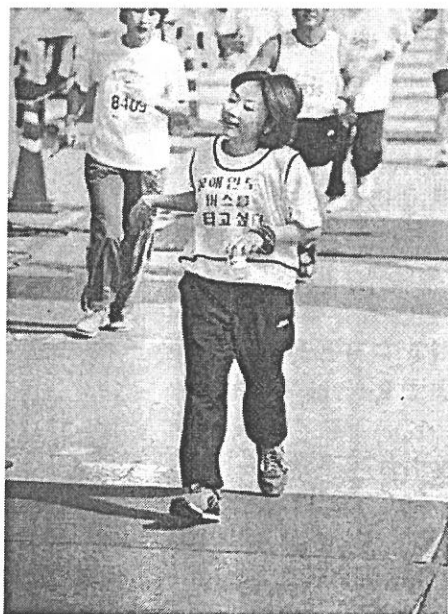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편집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총무)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통일마라톤 참석한 ‘꿈꾸는 사람들’ 회원 황수용, 이수진 씨)

[사람이야기]

새로운 '꿈지기' 이수진 씨를 만나

박신혜(꿈꾸는사람들 회원)

이수진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자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의 새로운 꿈지기(모임지기)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에 가장 늦게 합류했다가 10월부터 꿈지기 역할을 맡게 된 이수진 씨는 다소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 사랑방 후원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 사랑방에 오기 전에는 어떤 단체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단체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선배의 소개로 사랑방을 알게되었습니다.

◎ 꿈꾸는 사람들(이하 꿈모임)의 새로운 꿈지기가 되셨는데요, 새로운 꿈지기로써 꿈모임에 대한 지금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사회인이든 학생이든 자기가 하는 일 외에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 자체가 개인을 성숙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인권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교류하고 해결점을 찾아보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구요.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같이 이런 과정을 나누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꿈모임은 우리가 항상 사랑방 후원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활동의 중심에 사랑방을 고려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과의 관계 또한 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계속 만들어 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사랑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꿈지기의 커다란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랑방에 후원회원으로 회비내는 것 외에도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주세요.

= 인권정보자료실에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담당자인 최은아 씨가 주제를 정해주면 그 중 원하는 주제를 조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법률이나 각종 사이트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문서 자료를 수집해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까지 수집된 자료를 파일로 만들어 완료합니다.

◎ 이런 후원 활동(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 느낌은 어떤가요

= 우선, 꿈모임 활동이 아닌 사랑방 일 중 하나니까 전혀 느낌이 다르지요. 사랑방 활동에 직접 동참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사랑방 식구 중 하나라는 느낌이 뚜렷하게 들고 책임감도 더 느끼구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인 도움도 많이 되구요.

◎ 사랑방 후원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소에 생활에서 부딪히는 인권 문제들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 얼마전 과주에서 열린 통일 마라톤에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¹⁾라는 로고를 달고 참여하셨는데요, 어땠나요?

= 처음에, 뛰기 시작하는데 시선이 제게 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담스러웠죠. 위축되어 있었고 주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가 달리는 정말 힘든 때였죠. 그렇게 생각하고부터,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길 중간에서 달렸습니다. 뿌듯했던 순간은 제 앞에서 달리시던 한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제 뒤쪽으로 달리시면서 “아가씨 파이팅!” 하시고 바나나를 하나 주시던 때였어요. 바나나는 받지 않았지만 힘든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격려였습니다. 약간 몽클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길지 않은 코스지만 완주를 했다는 것이구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방과 꿈모임에 대한 수진 씨의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모임은 사랑방 후원회원 모임이지만 성원들 각자가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꿈꾸는 사람들의 더욱 활발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꿈파카툰

이동수

*꿈파란 '꿈꿈히 마저며 살자'의 준말이에요 ^^**



1) 휠체어 장애인들은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내 어디든 맘놓고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장애인 이동권 쟁취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9월 월례포럼]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정리: 김영원(인권교육실 상임활동가)

대 : 9월 22일(토)

인권운동사랑방 9월 월례포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실시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실이 포럼을 주관했기 때문인지(*^^*V) 이번 포럼은 발제자 중심의 '발제-토론' 형식이 아닌 '참여적 방법론'을 새롭게 시도했어요. 참석자들은 세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두 모둠은 신상공개 반대, 한 모둠은 신상공개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각 입장에 대한 근거를 "Best 3, Least 3"로 정리해 발표를 했어요.

모둠별 토론 결과, 신상공개 찬성 이유로는 '형량이 가볍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설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등이 제출됐고, 심지어 '성범죄자는 XX놈'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나왔답니다.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된 것은 '이중처벌, 가해자 가족의 피해, 동명이인에 대한 피해, 가해자의 프라이버시, 재범방지의 효과가 없다' 등이었어요.

각 모둠의 발표가 끝난 후 이영희(페미니스트 웹진 [언니네] 편집팀)씨가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어요. 주요 내용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너무나 관용적이어서,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가해자를 과도하게 동정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움으로써 성범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고 △성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미(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회원)씨는 '가해자 인권'에 대한 고민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면서도 "신상공개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공개가 불가피하며, 이는 '인권'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새로운 인권개념을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신상공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을 해주셨어요.

반면,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씨는 이번 신상공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번 청보위의 신상공개는 "선정적 방식을 통해 국민을 집단 최면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다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있고, 가해자 가족의 상처가 과연 피해자의 고통과 맞교환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청보위가 과연 사회적 사형선고를 내릴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자유형·벌금형 이외의 또다른 형벌로서 명예형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사회적 면피용으로 신상공개가 활용될 우려, 다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정당화시킬 우려, 가해자 가족이 입게될 피해, 성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 청보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과 신상공개의 주체에 대한 문제' 등이 토론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청보위가 신상공개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 만큼은 모두가 합의한 지점이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정리 : 이창조(자유권위원회 활동가)

때: 10월 13일(토)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겨레21의 기획보도 이후 많은 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 비로소 병역거부권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무려 1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 갇혀 있으며, 해마다 5-6백명씩 교도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무엇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

이날 포럼은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로 시작되었습니다. 4개의 조로 나뉘어 30-40분간의 열띤 토론을 벌인 참석자들은 조별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살생 반대, 전쟁반대, 위계적 군사문화 반대" 등이 주장되기도 했고,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병역의무에 있어서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1998년, 2000년 유엔인권위 결의안에 동참하는 등, 이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국제무대에서 선언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여성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체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 프로그램에 이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 씨의 발제²⁾, 그리고 ①거부대상으로서의 '병역'은 어디까지인가? ②절대적 병역거부와 선택적 병역거부 ③'양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가? ④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거부대상으로서의 '병역'이란 전투부대든 비전투부대든 모든 군 내부의 조직 뿐 아니라, 방위산업체 등 전투지원을 위한 직간접적 관련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여성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차대전 당시 총알주머니를 생산하거나 총탄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요구받은 여성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는 사실도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절대적 병역거부자)에게만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특정 국가와의 전쟁 혹은 동족간의 전쟁에 국한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등의 선택적 병역거부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 발제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이후에 차근차근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속적 양심’도 ‘양심’

병역거부권 인정의 전제가 되는 ‘양심’의 개념에 대해서는, “고차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만이 양심이 아니며, ‘세속적’ 양심 또한 ‘양심’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형제 가운데 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 영화나 주변의 체험을 통한 병역거부 신념 등도 얼마든지 ‘양심’의 테두리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양심이 “얼마나 진지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대체봉사 도입 시급”

이와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봉사’(혹은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견해였습니다. 더불어 군내에서 집총을 거부하고 다른 일을 수행하는 ‘대체복무’ 개념 대신, 군대 밖에서 군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대체봉사’ 혹은 ‘민간봉사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봉사는 ‘처벌’이 아닌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역종과 기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봉사를 실시하더라도 ‘국가 동원권의 한계’를 주장하는 ‘완전거부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과까지 보호하기에는 ‘법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병제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피해의식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이례적 참석...MBC PD수첩 방영

이날 포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이미 옥고를 치른 사람 뿐 아니라,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수명 참여했습니다. 여호와의증인들은 지난 수십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해 오면서도 일체의 사회적 발언과 행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단체들과도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 왔으나, 이날처럼 직접 토론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 외에도 평화인권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 이재승 국민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대학생, MBC PD수첩팀 등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24일(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여호와의증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고, MBC PD수첩팀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기로(10/23 오후 11시) 했습니다.

사/업/보/고

(2001년 9월 다섯째 주 - 10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 '교칙캠페인' 보고서 끝냈습니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하여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 작업은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논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칙 중에서 학생 생활과 관계 깊은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교칙을 모으는 데만 반년 이상이 걸렸고, 5차례에 걸친 분석자문위원과의 토론과 집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교칙을 읽어가며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느라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눈이 빠질 지경이었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 해주신 자원활동가 분들과 분석자문위원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10월 22일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대한 2차 보고서 제출, 청소년 인권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인권 문제를 계속 부각시킬 것입니다.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권교재 집필

유네스코에서 발간 예정인 중학교 재량활동시간 교재의 '인권' 분야 집필을 끝냈습니다. 세계화, 환경, 다문화, 평화, 인권의 다섯 주제가 담기는 이 책은 연말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중에서 '인권' 분야의 책임 집필을 맡고 있습니다.

감옥의 인권

● 대구교도소 인권침해 호소 잇따라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인 김용호씨는 9월초 면회과정에서 자신이 교도관에게 제출한 행정심판 서류를 교도소측에서 분실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교무과장, 보안과장 등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인권팀은 김용호씨를 면회하고 김 씨가 보내려다 불허된 10여통 이상의 편지와 교도소측에서 10여일 이상 지체 후 발송한 편지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이야기했습니다.

면회 후 김씨는 또다시 소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것 때문에 7일간 조사를 받은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측에서 자신에게 돌려주지도 않았던 서류를 돌려주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이 이어지자 이에 항의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3일만에 김씨는 2월간의 금치에 처해져 징벌방에 갇혔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김씨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접견을 갔으나 교도소측은 징벌중이라는 이유를 접견도 불허했습니다. 11월 16일까지 김씨는 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고의로 김씨의 구제절차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구요.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의 소송이나 청원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10월에 만난 박종남, 이정근씨도 같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정서를 대신 접수해달라고 한 재소자가 밀서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측의 징벌도 남용의 정도가 큼니다. 서류복사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문을 찾다가 징벌 2월에 처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교도소로 이감간 이후에야 고소장제출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형법 시행령은 편지를 불허할 경우 재소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의를 많이 하는 재소자,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어 불허사유를 설명해줍니다. 어처구니없죠.

● 국제엠네스티 관계자와 간담

10월 15일 런던에 있는 국제엠네스티 활동가 라지브 씨와 수키 씨가 방문했습니다. 고문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중인 이들은 특히 한국의 교도소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 상황을 전했으며 국제연대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 「유엔과인권」 번역 막바지

인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엔의 활동을 알기 쉽게 해설한 (가제) 「유엔과 인권」 (원제 『Human Rights Today-UN Briefing Papers』) 번역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1948년 유엔 창설 이후, 세계인권선언 성안작업부터 최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이르기까지 인권증진을 둘러싸고 촉매제 역할을 해온 유엔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분야에서 유엔의 역할은 크게 각종 인권관련 선언과 조약을 만들어 국제인권규범을 제도화하는 일과 이것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인권기구의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 50년 동안 인권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설립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인권기구를 개혁하고 규범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인권활동가에게 유엔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벌번역은 박신혜 씨, 1차 감수는 김민선, 장경주 씨가 수고해주

클릭! 인권자료묶음

효성파업 및 용역강패 실상 관련자료

■ 효성노조 파업

- 효성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2000.7 울산지역 현장조직대표자회의)
- 효성노조 파업에 대한 진실보기(2000.6 전국민주화학생유노동조합연맹)
- 효성사건을 계기로 본 노동자의 파업권(2000.7 울산지역 현장조직대표자회의)
- 파업권 쟁취를 위한 현종의 상황(2000.7 울산지역 현장조직대표자회의)

■ 효성노조 파업장에 투입한 용역강패의 실상과 사례 (민중연대)

- 용역경비 업체의 실태
- 용역경비 업체에 대한 고발장

■ 효성사건 관련, 국정감사 질의서(2001.9 효성노동조합)

- 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셨습니다. 최종감수 작업이 끝나면, 이용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유권위원회

● 집시법 개정운동 적극 참여

23일(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의 발족을 계기로, 본격적인 집시법 개정 활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연석회의'는 집시법 독소조항 불복 총행동, 국회 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독자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연석회의 준비모임에 참석해 왔고, 법률개정안 준비팀에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 준비팀은 이미 집시법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오는 31일 열릴 국회 내 토론회에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회권위원회

●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9월 26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 관련 연대기구인 '파견철폐공대위'의 50차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도 "비정규직 철폐"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수요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한국통신, 린나이코리아, 대송텍, 이랜드, 방송사, 인사이트 코리아 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상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손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서 싸워나가자고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대량해고 등으로 오랜 싸움을 힘겹

게 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좋은 결실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복전쟁 반대 활동

미국이 대(對)테러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만큼이나 끔찍한 인권침해 경력을 가진 아프간 반군세력(아프간 북부동맹)에 대한 군사원조 뿐 아니라 공동의 군사행동에도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가 더욱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사회단체들은 미국의 보복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복전쟁의 반인권성을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더욱 비참해진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삶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테러전쟁' 혹은 '테러방지'란 명분 하에 국가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상황이 저희들이 특히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 "국가인권위원 인선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이 청와대 앞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노순택)

[인권하루소식 다시보기]

'인터넷 내용등급제'와의 전쟁기

인권하루소식 기자 '범용'이

10월 세째주 내내 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전쟁을 치렀다. 10월 12일 '청소년 유해매체 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정통윤)가 추진해 온 인터넷 검열체계가 틀을 갖추게 됐으며, 이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것.

하지만 내가 '취재'라 하지 않고 굳이 '전쟁'이라 표현한 이유는, 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체계를 이해하고 기사화 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다. 우선 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체계는 '내용등급서비스'와 '유해매체표시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에 대한 근거법률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보통신 분야의 낯선 용어들이 취재 자체를 부담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일 인권하루소식 편집회의에서 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취재하라는 '특명'을 받았고, 정통윤의 복잡한 대응논리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가능한 명료하게 기사화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정통부 장관고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나는 기자로서는 치욕적인 핀잔을 들었다. "관련 자료는 읽었습니까? 다른 기자들과 비교해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으으으~~~~'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괜시리 오기가 났고, 다른 신문기사보다 좀더 통렬히 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체계를 고발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낱밤을 새며 1면을 전부 채워서 완성된 기사가 10월 16일자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이었다. 하지만 내 자신도 그렇고, 주위의 평도 그렇고, 그 기사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정통윤의 검열체계의 복잡한 논리를 세세히 짚어 준다는 것이, 그만 그 복잡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그후 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제대로 기사화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한시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러던 중 18일 나에게서 그 빛을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 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들이 정통부 장관고시를 비판하며 정통윤 부근에서 긴급 항의집회를 가졌던 것. 전날 편집을 하느라 밤을 새우고 아침에 잠시 눈을 붙인 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챙겨먹고 집회예정 장소인 강남역으로 향했다. 강남역 부근에서 30분 정도 헤맸지만, 집회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나는 제때 맞춰 집회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집회는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나는 집회 내내 '좀더 쉽게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기사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정책실장과의 인터뷰. 그래서 집회가 끝난 직후 나는 장 실장에게 인터뷰를 청했고, 장 실장은 흔쾌히 응했다. 이때 내가 취했던 방식은 서면 인터뷰였는데, 이는 보다 정합적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사랑방에 돌아온 후 곧바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 질문을 8개 정도 작성하고, 장 실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때가 오후 4시쯤 됐을까? 당시 나는 서면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웬 걸?', 장

실장은 밤 11시가 다 되어 답신을 보내왔다.

문제는 그 답신의 내용이 내가 원했던 것만큼 명쾌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추가로 약 2시간에 걸쳐 전화인터뷰를 했고, 이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 작업 또한 만만치 않아, 결국 그날도 밤을 새고 말았다. 그래서 나간 기사가 10월 19일자 <정통윤, 검열준비 끝>이었다. 이 기사의 반응은 처음보다는 좋았다.

하지만 나에겐 여전히 아쉬움이 많았다. 19일 새벽 장 실장과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단체들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 생각보다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들이 22일부터 60일 동안 릴레이로 '24시간 철야 노상단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면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접속률이 지금의 90% 이상에서 60% 이하로 푹 떨어질 것이 뻔하다"는 장 실장의 예측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러던 차에 19일 인권하루소식 논평회의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논평을 쓰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나에게 초안 작성의 임무가 주어졌다. 논평의 방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회단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논평을 쓴다는 것은 기사를 쓰는 것보다 2-3배나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논평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내심 좋았다. 이를 밤을 새 쓴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물론 투박하고 거친 나의 논평은 편집장에 의해 최종감수를 받은 후 10월 20일자로 나갔다. 논평에는 복잡한 정통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대신, 내용등급서비스와 유해매체표시제가 왜 인터넷 검열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만 제기했다. 이로써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취재전쟁은 일단락됐다.

사실 정통윤의 복잡한 인터넷 검열체계를 한정된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으로 다 다루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두 번의 기사와 한 번의 논평이 나간 후에도 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체계에 대해 속 시원히 이해한 사람은 주위에서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어떤 신문도 정통부 장관고시가 뜻하는 함의를 심도깊게 파헤치려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취재는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인권문제를 다루어 왔던 인권하루소식의 목적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기사를 다시 읽는다면, 그 의미가 새록새록 새겨질 지도 모른다.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통부 장관고시의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PICS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통신망법 제42조에 근거한다. 이때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하는 '전자적 방식'이다. 따라서 PICS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가 되었다고 접속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비계법 제32조는 PC방에, 청소년보호법 제5조는 공공기관에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망법 제42조와 음비계법 제32조, 청소년보호

법 제5조가 만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제도는 검열체계가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의 SafeNet 등급기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2. -음주조장 -흡연조장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없음	비속어 없음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내용등급서비스'는 우측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상 모든 정보를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다. 정보제공자는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용자도 '자율적으로' 정보의 이용수위를 정한다.

이용자가 이용정도를 모두 4등급으로 설정해 놓으면, 기술적으로 차단되는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용자가 이용정도를 성행위 2등급으로 설정해 놓으면, 성행위 3등급 및 4등급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정보의 제공이든 이용이든 국민들 스스로 등

<청소년유해매체 및 불온통신 선정 기준>

급과 이용정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가의 검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인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내용등급 서비스의 현재 통신망법 제41조 1호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p>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p>청소년보호법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중 개별심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반대성 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5.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6.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7.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8.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9.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0.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11. 도박과 사행심 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12. 청소년 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3. 청소년 유해업소등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p>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중 불온통신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p>
<p>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불온통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의 개발 및 보급'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내용등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유해매체표시제〉

이와 달리 '유해매체표시제'는 해당 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 만을 판단한다. 이때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들이다. 앞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준들은 내용등급서비스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상당히 모호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조항들은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기도 하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는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판단하는데,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올해 김인규 교사의 나체예술시비,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스쿨넷'의 폐쇄 결정 등이 정보통신윤리위의 작품인 것. 물론 정보통신윤리위는 정보통신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결국 청소년유해매체표시제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등급선정과는 전혀 별개이다.

이번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는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지정된 청소년 유해매체에 전자적 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조항에 근거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통신망법 제64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현재 공동행동은 정통윤의 두 가지 검열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라고 포괄적으로 비판한다. 따라서 정통윤이 추진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와 공동행동이 반대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용등급제 = 내용등급서비스 + 유해매체표시제」인 것이다. 공동행동이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이 둘은 조만간 하나의 체계로 합쳐질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이 둘을 구분하는 논리는 정통윤의 검열체계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번 정통부 장관고시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PICS' 기술표준에 따르라고 한 것.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 방식인 'PICS'는 이미 내용등급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동행동 남녀활동가들은 그토록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방/소/식

(2001년 9월 다섯째 주 - 10월 셋째 주)

■ 서준식 전 대표, 야마가타영화제 참관
서준식 전 대표는 추석 성묘 차 2주간 일본을 방문한 길에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참관하고 돌아왔습니다. 작품의 질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6-7개 극장에서 동시 상영되는 관계로 꼭 보고싶은 작품들을 놓친 것이 많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제6회 인권영화제에서 꼭 상영하고 싶은 작품을 여러 편 만났다고 합니다.

■ 인권위원 선임에 항의시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인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선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뚜렷한 인권활동 경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들이 대거 인선되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개정조치 반대하고,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국회의원을 '반헌법경력자'로 낙인찍어 온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까지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에 소속된 인권운동사랑방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와 항의 집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외치며 뺨 마라톤
사랑방의 청년 후원회원 모임인 '꿈꾸는 사람들' 회원들이 통일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42.195 Km 완주, 하프 마라톤, 10Km 등 전 코스에 도전한 '꿈꾸는 사람들' 회원 3인은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고 뛰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인권에 대해 알리는 구호를 달고

뛰고 싶다는 고민 끝에 현안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부각시키기로 하고 특별 제작한 조끼였습니다. 조끼를 제작해준 체육사 주인께서도 뜻깊은 일이라며 돈을 받지 않으셨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뛰지는 각오입니다. 특히 운동 안 하기로 소문난 류은숙 사무국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내년에는 같이 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고근에 씨, 3개월 간 안녕~
인권교육실의 고근에 상임활동가가 10월 24일 필리핀에 갑니다. 3달간 머무르며 필리핀의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항공료와 생활비 일체는 '국제 인권 인턴쉽 프로그램(IHRIP)'의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인권활동가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3개월간 타국에서의 인권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교칙분석을 하느라 고생한 고근에 씨에게 좋은 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울산영화제 파행사태 조사
울산에서 벌어진 '밥·꽃·양' 사태로 인해 인권운동사랑방 또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지만 '인권영화제'를 개척하고 지켜온 사랑방이기에 많은 오해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만났고,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2001년 9월 회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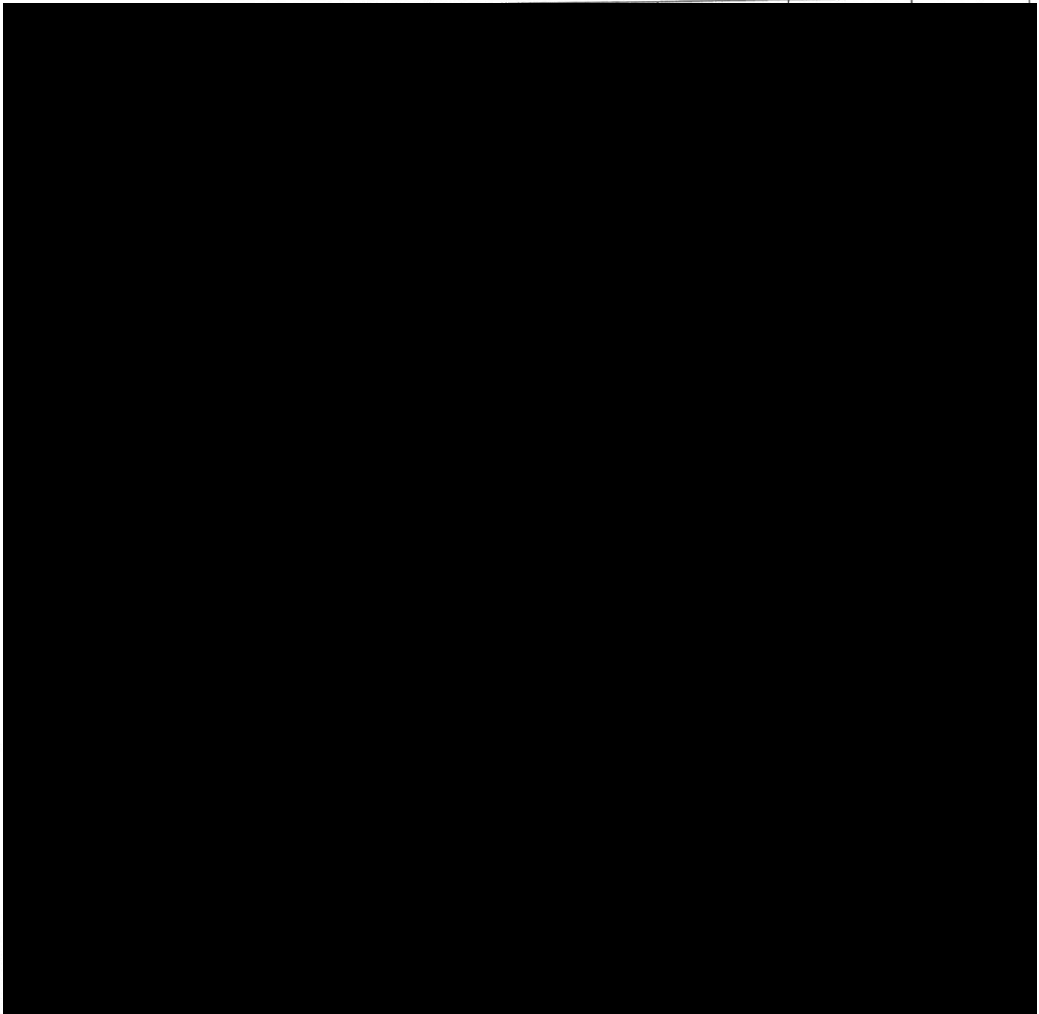
(2001년 9월 17일 - 10월 16일)

이월금 : 36,037원	
수입	지출
<p>사업수익 2,526,46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소식 2,339,000원 <li style="padding-left: 20px;">구독료(118명) 2,061,170 <li style="padding-left: 20px;">기사배급 277,830 - 간행물 판매 61,000원 <li style="padding-left: 20px;">2000국보법보고서 1권 <li style="padding-left: 20px;">인권교육길잡이 1권 <li style="padding-left: 20px;">하루소식 합본호 2권 <li style="padding-left: 20px;">한국감옥의 현실 1권 <li style="padding-left: 20px;">불심검문자료집 1권 - 강연료 100,000원 - 방송출연료 26,460원 <p>후원금 4,820,59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후원 4,172,590원 - 기타후원 630,000원 <p>상임활동가 기여금 460,000원</p> <p>차입금 800,000원</p> <p>은행이자 4,934원</p>	<p>사업비 1,489,92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소식 우편발송 163,610원 - 자료구입 57,000원 - 월레포럼 263,870원 - 감옥인권팀 130,020원 - 사회권위원회 10,000원 - 연대사업 100,000원 - 사람사랑 제작발송 142,420원 - 간행물구입(판매용) 493,000원 - 출장비 120,000원 - 기타사업비 6,380원 <p>활동비 4,200,000원</p> <p>사무실유지비 920,400원</p> <p>통신비 1,110,400원</p> <p>사무비품 236,180원</p> <p>사무국 식비 204,940원</p> <p>생활비 87,100원</p> <p>기타 343,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수상 뒷풀이 118,000원 - 사무국 등산 및 야유회 50,000원 - 정간물 구독료 175,000원
총수입: 8,593,984원	총지출: 8,591,940원
잔액:	38,081원
부채:	2,900,000원

● **특별사업기금 사용내역**

- 이월 : 3,498,670원
- 지출 : 5,190원('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잔액 : 3,493,480원

<9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10/16일(지로는 15일) 까지



<2001년 9월 재정 세부내역>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인권상' 상금으로 945만원 (1천만원에서 세금 55만원 공제)을 받았습니다. 상금의 용처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이번 달 회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 인권캠프를 통해 사랑방과 인연을 맺은 심은희(학부모) 님과 스위스에서 팍스로마나 사무총장으로 활동중이신 이성훈 님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도서출판 사람생각에 『인권교육길잡이』 등의 구입비 49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는 '과천철폐공대위' 소속단체로서의 분담금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행사 참가비로 연대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 추석연휴 전날 사무국 활동가들의 단합을 위한 등산과 야유회를 진행하면서 일부 비용을 사무국에서 부담했고, '올해의 인권상' 수상 뒷풀이에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너무 많이 놀았나요?^^;)
- 시사주간지 등의 구독료 1년치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출이 많았고, '울산인권영화제와 밥꽃양'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에 다녀오느라 출장비가 지출되었습니다.